

산업·통상 정책이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FTA 전후 비교

The Effect of Industrial-Trade Policies on the Export-Oriented Firms: The Comparison of Before-and-After FTA

이상규*, 김수동*, 김수현**
산업연구원*,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Sang-Kyu Lee(leesag@kiet.re.kr)*, Soo-Dong Kim(sdskim@kiet.re.kr)*,
Soo-Hyun Kim(kimsoo@pcu.ac.kr)**

요약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 간 통상협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상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전과 후에 영향력이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이중규제 금지 등이 영향력 있는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자유무역협정 | 산업정책 | 통상정책 |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

Abstract

The importance of trade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s becoming higher in order to utilize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ountry's industrie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respond to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As time goes by, it is needed to redefine and reestablish the functions of industrial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We focus on the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related to FTA. Mainly we do research the impact (before and after FTA) of industry, trade policies, and firms'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export-oriented firms. For this end we conduct a survey on the firms' evaluation of the trade related policies and analyze with the panel data regress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FTA, the connection with export support program, the training of expert HRs, and the prohibition of double regulation are the main influential policies.

■ keyword : | FTA | Industrial Policies | Trade Policies | Panel Data Regression Model |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7년 08월 10일

수정일자 : 2017년 09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9월 21일

교신저자 : 김수현, e-mail : kimsoo@pcu.ac.kr

I. 서론

최근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대외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국가 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같은 양자 간 통상협력 추진은 이러한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 10년 동안 FTA가 실제적으로 발효되어 경제적 영향을 주고받는 국가가 49개국에 이르고 있다[1].

이러한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자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내부의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경제협력에 대한 분석이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차별화된 상황인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FTA를 활용하면 수입과 수출 양쪽 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수입 시 관세인자로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수출 시에는 바이어에게 관세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생기며, 해외 시장에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FTA 활용을 통해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으로써 수요물량 증가, 수출 확대, 현금유동성 개선 등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FTA 관련 기존 연구는 각 해당 FTA별로 산업정책 전략을 제시하거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2]. 또한, FTA로 인한 수출 및 수입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3].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통상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수출 증대라는 경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관련 통상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출기업의 통상협력 대응 실태조사 결과[1]에 따르

면 FTA 발효 후 수출장애 요인으로 ①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어려움 ② 글로벌 전문인력의 부족 ③ 해외 유통망 확보 곤란 ④ 시장수요/바이어 정보 등 현지시장 이해부족 ⑤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⑥ 각종 인증 등 외국 정부의 규제 ⑦ 수출운영자금의 부족 ⑧ 자사제품의 낮은 인지도 ⑨ 정부조달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제한 ⑩ 협력사의 글로벌화 대처 미흡 등의 순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인증 등 외국 정부의 규제, 시장수요/바이어 정보 등 현지시장 이해부족, 글로벌 전문인력의 부족, 해외 유통망 확보 곤란 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장애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협력의 경제적 효과 및 수출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유효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상협력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FTA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I.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통상 정책

산업정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변수를 고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적절하게 상호작용하여 최적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한다[4]. 이에 따라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상협력의 확대에 따른 대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은 통상정책을 내포하되 이러한 통상정책과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통상정책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규제압력의 강화, 비관세 장벽 제거 요구, 규제와 기준의 차이에 의한 무역저해 방지를 위한 상호인정,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은 이러한

선진국의 통상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통상정책 전략은 상대국을 상대로 공공·민간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포함한 상대국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정보획득 노력을 포함한다. 또한 규제정책과 무역보호조치가 해당 국가에서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혹은 조직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업 및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시범사업 및 표준·인증체계 정비 등을 통한 초기 내수시장 활성화
- 설비투자, R&D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금융지원
- 무역상대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정책 대응
-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 협력사와의 제휴 및 협력에 대한 지원
-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 규제 시행 지원
- 글로벌 규제의 국내법 반영
-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강화
- 외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
-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
- 기업에 대한 경영, 수출, 법률 등 컨설팅 제공
- 수출업무 관련 행정절차 효율화
- 무역 분쟁 조정, 수입 규제 대응 지원

특히, FTA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 품목 분류 지원 강화(관정기간 단축, HS코드 최신화 등)
-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 맞춤형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 원산지 관리 시스템 개선

-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 정부조달 참여 지원
- 사후검증 지원 강화(사전진단, 자가검증 툴 개발)
- 해외 통관애로 해소
- 인증 및 규제에 의한 이중규제 방지
-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

III.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수립한 계량모형은 수출확대를 위한 각각의 산업 및 통상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경영활동(고용, 설비투자, 마케팅, 연구개발, 자금조달)이 기업의 수출실적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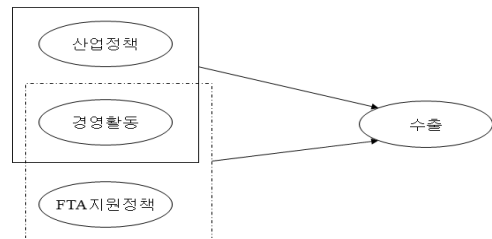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즉, FTA를 전후로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산업 및 통상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실적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비교한다. 즉 수출실적에 어떤 정책이 성과가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추정과 함께 FTA 발효 전과 후를 별도로 추정하여 전후 효과를 비교한다.

<모형>

$$\ln(EXT)_{i,j,t} = \alpha + \beta_1^I \ln(Inv_{j,t}) + \beta_2^E \ln(Epm_{j,t}) + \beta_3^M \ln(Mkt_{j,t}) + \beta_4^R \ln(RnD_{j,t}) + \beta_5^F (Fc_{j,t}) + \sum_{n=1}^k \eta_n (IP_{n,t}) + \sum_{m=1}^l \eta_m (TP_{m,t}) + \gamma_1 \ln(GDP_t) + \gamma_2 (TRF_{j,t}) + \gamma_3 (CPT_{j,t}) + u_{i,t}$$

여기서, $EXT_{i,j,t}$: t 기 i 기업의 j 품목 수출금액,

$Inv_{j,t}$: 설비투자,

$Epm_{j,t}$: 고용규모,

$Mkt_{j,t}$: 마케팅 지출규모,

$RnD_{j,t}$: 연구개발 투자 규모,

$Fc_{j,t}$: 부채비율,

$IP_{n,t}$: n 개의 산업정책,

$TP_{m,t}$: m 개의 통상 및 FTA 지원정책,

GDP_t :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거시 통제변수,

$TRF_{j,t}$: 품목 j 의 t 기 FTA 관세율,

$CPT_{i,t}$: 기업 i 의 총자본규모,

$$u_{j,t} = \nu_j + \epsilon$$

$t = \dots, t_{-2}, t_{-1}, t_0, t_1, \dots$ 이며, t_0 는 FTA가 발효된 시점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 i 의 대표품목 j 에 대해 FTA가 발효된 시점인 t_0 를 전후로 독립변수인 기업의 경영활동 변수들과 산업 및 통상정책 평가변수가 수출실적으로 표시된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산업 및 FTA지원정책 활용이 기업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면, FTA가 발효되기 전과 발효된 후의 경영실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활동의 차별화를 통해 FTA에 적응하게 되고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종속변수 (EXT) $_{i,j,t}$ 는 t 연도에 i 기업의 j 품목 수출실적이다. 금액으로 표시된 변수들은 로그를 취해 표준화하였다. Björn Falkenhall and Johan Eklund[5], 체지윤 외[6]에서 이용된 통제변수들이 패널분석에 포함된다. (GDP_t)는 t 기의 거시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통제변수이고 ($CPT_{j,t}$)는 기업 통제변수이다.

IV. 실증분석

1. 연구방법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거래소 상장사 중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제조업 종사 기업이고,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일반사항, 대표 수출품목에 대한 현황, 수출경쟁력 요인, 기업의 경영활동 특성,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다.

표 1. 설문조사 개요

| | |
|-------|--|
| 조사 대상 | 한국거래소 상장사 중 제조업(일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포함) 종사 기업 1,191개 |
| 유효 표본 | 총 400개 업체 |
| 조사 기간 | 2014. 8. 28 ~ 2014. 10. 17 |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Fax, E-Mail을 이용한 조사 |

기업의 경영활동, 경영성과, 미시 통제변수는 Kisvalue의 기업별 재무자료에서 확보하였다.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II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한국증권거래소(KOSPI)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패널자료이며 분석기간은 FTA별로 상이하며 FTA 발효 전후 2년씩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의 연간 자료이다. 분석에 이용된 기업은 이들 상장기업 중에서 산업 및 통상정책이 FTA 미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다. 응답한 기업수는 400개이며 각 기업의 4년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표본수는 1600개 내외이다. 구성된 패널은 분석기간이 4년으로 동일한 균형패널 자료(balanced panel data)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이 제시한 품목에 대해 품목별 무역통계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에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해당 품목의 기업별 수출금액이며 설명변수는 원/달러와 원/유로 실질환율, 상대국별 FTA 관세율 등이다. 국내총생산 데이터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 Worldbank, WTO IDB,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가져왔다.

분석대상이 된 FTA는 한-미(2012년 3월 15일 발효), 한-EU(2011년 7월 1일 발효), 한-아세안(2007년 6월 1일 발효) FTA와 한-인도 CEPA(2010년 1월 1일 발효) 4개이다. FTA의 발효 전 2기는 발효시점 이전 연도

(t-1)와 이년 전(t-2)을 가리키며 발효 후 2기는 발효시점이 포함된 해(t)와 다음 해(t=1)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발효 전 2기는 2010년과 2011년이고 발효 후 2기는 2012년과 2013년이다.

패널데이터 회귀분석[7-9]으로 분석을 하였고, 패널데이터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ooled OLS로는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없어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다른 추정방법으로 기업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계열이 4기간에 불과해 추정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2. 분석결과

[표 2]는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 방안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실적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정책변수 중에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무역상대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책대응,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강화,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은 수출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정결과는 1%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표 2. 수출 지원을 위한 산업정책과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수 : 수출금액 | FTA 전 | | FTA 후 | | 전체기간 | |
|--|----------|-------|----------|-------|----------|--------|
| | 계수 추정치 | z 값 | 계수 추정치 | z 값 | 계수 추정치 | z 값 |
|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 0.07 | 1.44 | 0.12** | 2.12 | 0.17*** | 4.74 |
| 시험사업및표준·인증체계정비추진등을통한초기내수시장활성화 | -0.13** | -2.28 | -0.26*** | -5.26 | -0.23*** | -5.59 |
| 설비투자,R&D등경영활동에대한금융지원(세제혜택포함) | 0.04 | 0.71 | -0.19*** | -3.74 | -0.06* | -1.72 |
| 무역상대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책대응 | 0.46*** | 6.71 | 0.28*** | 4.38 | 0.4*** | 8.39 |
|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 -0.21*** | -3.86 | -0.11** | -2.01 | -0.1*** | -2.68 |
| 협력사와의 제휴 및 협력에 대한 지원 | -0.26*** | -4.19 | -0.05 | -0.92 | -0.23*** | -5.13 |
|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 -0.02 | -0.27 | 0.49*** | 6.84 | 0.23*** | 4.49 |
| 글로벌 규제의 국내법 반영 | -0.10 | -1.55 | -0.29*** | -4.36 | -0.18*** | -3.96 |
|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강화 | 0.24*** | 4.64 | 0.17*** | 3.09 | 0.3*** | 6.77 |
| 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 -0.02 | -0.33 | -0.04 | -0.50 | -0.13** | -2.27 |
|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 | 0.27*** | 4.45 | 0.08 | 1.28 | 0.21*** | 5.62 |
| 기업에대한경영,수출,법률등컨설팅서비스제공 | -0.11* | -1.75 | -0.28*** | -5.18 | -0.26*** | -5.79 |
| FTA등수출업무관련행정절차효율화하는제도개선(원산지규정,후속검증등) | -0.02 | -0.33 | 0.13** | 2.02 | 0.06 | 1.20 |
| 무역분쟁조정(지적재산권혹은검사분쟁등),수입규제대응(덤핑,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등)지원 | 0.10 | 1.54 | -0.02 | -0.33 | -0.01 | -0.38 |
| 설비투자 | 0.00 | 0.03 | -0.04 | -1.64 | 0.01 | -0.17 |
| 마케팅 | 0.05** | 2.21 | -0.12*** | -5.28 | -0.04** | -2.43 |
| 연구개발 | -0.06** | -2.60 | 0.01 | 0.48 | 0.01 | -0.14 |
| 고용활동 | 0.14* | 1.85 | 0.47*** | 7.42 | 0.24*** | 5.21 |
| 자금조달 | 0.01 | 1.57 | -0.12*** | -3.79 | -0.23** | -2.58 |
| 총자본규모 | 0.18*** | 3.31 | -0.02 | -0.46 | 0.12*** | 4.01 |
| 상대국 GDP | 0.15*** | 5.41 | 0.04* | 1.85 | 0.05*** | 2.69 |
| 관세율 | -0.04*** | -4.44 | -0.07*** | -8.21 | -0.07*** | -10.46 |
| 상수항 | -0.77 | -0.67 | 9.47*** | 9.57 | 4.21*** | 5.36 |

주 : *는 10%내에서, **는 5%내에서, ***는 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FTA 등 수출업무 관련 행정절차 효율화하는 제도 개선(원산지규정, 후속검증 등)은 FTA 발효 전보다 후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활동 변수 중에서는 고용과 자금조달 활동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용이 증가할수록 수출실적은 향상되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 이는 수출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창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 활동의 효과가 수출성가로 나타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들의 추정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국 GDP가 증가할수록 우리 기업의 수출실적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대국의 높은 관세율은 수출실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은 FTA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함께 수출실적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FTA 정책변수 중에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 지원, 사후검증지원강화(사전진단, 자가검증툴 개발 등),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실시 등)은 수출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정결과는 1%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 지원 등은 FTA 발효 전보다 후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정책지원 변수들의 경우 기업들이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활동 변수 중에서는 연구개발, 고용, 자금조달 활동이 수출에 긍정적인

표 3. FTA 지원정책과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수 : 수출금액 | FTA 전 | | FTA 후 | | 전체기간 | |
|-----------------------------|----------|-------|----------|-------|----------|--------|
| | 계수추정치 | z 값 | 계수추정치 | z 값 | 계수추정치 | z 값 |
| 품목분류지원강화(판정기간단축,HS코드최신화등) | -0.31*** | -4.80 | -0.21*** | -3.54 | -0.24*** | -4.43 |
|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0.37*** | 5.69 | 0.21*** | 4.62 | 0.22*** | 4.78 |
|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 0.46*** | 7.41 | 0.57*** | 7.92 | 0.48*** | 9.43 |
| 기업구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 | -0.13*** | -2.56 | -0.10 | -1.33 | -0.09 | -1.60 |
| 원산지관리시스템개선(특화시스템도입등) | -0.41*** | -7.67 | -0.36*** | -5.72 | -0.37*** | -7.92 |
|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 0.38*** | 5.87 | 0.42*** | 6.48 | 0.41*** | 8.02 |
| 정부조달 참여 지원 | 0.20*** | 2.85 | 0.34*** | 4.48 | 0.25*** | 4.67 |
| 사후검증지원강화(사전진단,자가검증툴개발등) | 0.11** | 1.90 | 0.11** | 2.24 | 0.18*** | 4.46 |
| 해외 통관애로 해소 | 0.09 | 1.28 | -0.03 | -0.38 | 0.07 | 1.32 |
| 인증 및 규제에 의한 이중규제 방지 | -0.80*** | -9.64 | -0.49*** | -5.74 | -0.63*** | -9.47 |
| 과도한정보요구방지(원산지확인서제3자확인제도실시등) | 0.38*** | 4.85 | 0.39*** | 4.32 | 0.35*** | 5.28 |
| 설비투자 | -0.05** | -1.77 | -0.06*** | -2.57 | -0.03 | -1.60 |
| 마케팅 | 0.02 | 0.82 | -0.06*** | -4.06 | -0.03* | -1.90 |
| 연구개발 | 0.00 | -0.09 | 0.03 | 1.59 | 0.03** | 2.19 |
| 고용활동 | 0.21*** | 3.17 | 0.46*** | 8.22 | 0.31*** | 6.35 |
| 자금조달 | 0.03 | 1.18 | 0.05*** | -2.44 | 0.18** | -2.32 |
| 총자본규모 | 0.20*** | 4.26 | 0.07 | 1.44 | 0.15*** | 4.05 |
| 상대국 GDP | 0.15*** | 7.06 | 0.04** | 1.92 | 0.08*** | 4.54 |
| 관세율 | -0.03*** | -4.46 | -0.07*** | -7.71 | -0.06*** | -10.49 |
| 상수항 | -1.52* | -1.75 | 3.19*** | 3.33 | 0.50 | 0.62 |

주 : *는 10%내에서, **는 5%내에서, ***는 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의 모형과는 다르게 연구개발 변수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FTA 활용지원을 위한 순수한 연구개발 활동, 예를 들면, 관세청,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출 실무에서 바로 활용되어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들의 추정결과는 앞의 수출경쟁력 모형과 일치하는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경쟁력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무역상대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책대응,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강화,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 등이다. 이들 중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FTA 등 수출업무 관련 행정절차 효율화하는 제도 개선(원산지규정, 후속검증 등)은 FTA 발효 후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 지원정책으로 성과를 보인 정책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 지원, 사후검증 지원 강화(사전진단, 자가검증틀 개발 등), 과도한 정보요구 방지(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실시 등) 정책이다. 그리고 수출보험·보증 지원규모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조달 참여 지원 등은 FTA 발효 후에 더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은 FTA 활용을 위한 최근 정부 정책이 품목분류 지원 강화(판정기간 단축, HS코드 최신화 등)와 원산지 관리시스템 개선(특화시스템 도입 등) 등 현장 업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업들은 전문인력 양성, 수출보험·보증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지원에 후한 평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

유는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낮아 실무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거나 현재의 지원정책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다룬 패널 데이터의 시계열이 4기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계열 기간을 충분히 확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이상규, 김수동, 강지현, 빙현지, 임성택, 송근혜, *통상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방안*, 산업연구원, 2014.
- [2] 이창우, “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돌파구 다자·복합 FTA 활용 수출증대 전략,”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15-29, 2017.
- [3] 손용정, “한국 기체결 FTA의 활용률과 실용률 분석,”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pp.71-91, 2017.
- [4] 산업연구원, *한국 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산업연구원, 2008.
- [5] Björn Falkenhall and Johan Eklu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gulatory Burden,” Swedish Agency for Growth Policy Analysis, OECD, 2010.
- [6] 채지윤, 김솔, 류두진, “주요국의 파생상품규제가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교육저널, 제19권, 2011.
- [7] 민인식, 최필선,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 STATA학회, 2009.
- [8] 이상규, 김수동, 김수현, “신산업 분야의 규제 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179-187, 2016.
- [9] 최봉호, 김상춘,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 변화에 대한 패널 추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388-395, 2015.

저 자 소 개

이 상 규(Sang-Kyu Lee)

정회원



- 1996년 8월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산업경영(박사)
- 1997년 11월 ~ 2004년 8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 연구원
- 2006년 12월 ~ 현재 : 산업연구

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신기술 분야, 산업정책

김 수 동(Soo-Dong Kim)

정회원



- 2005년 8월 : 미국 미주리 주립 대학(콜럼비아) 경제학 박사
- 2006년 8월 ~ 2007년 6월 : 대통령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수석전문관
- 2006년 4월 ~ 현재 : 산업연구

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FTA, TPP 등 무역 및 통상, WTO 무역 협정, 산업과 통상의 연계

김 수 현(Soo-Hyun Kim)

종신회원



- 1997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공학박사)
- 1997년 3월 ~ 2003년 2월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 연구원
- 2003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보통신경영, e-비즈니스, 최적의사결정 모형